



분신 사망한 건설 노동자는 말한다: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 갔다. 5월 1일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분신한 양희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 건설지부 3지대장이 다음 날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숙죄양 삼기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고인은 정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치졸한 공갈범 취급하는 모욕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자신의 몸에 불을 댕겼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한 것뿐인데 ...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고 ...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야 4당 대표들 앞으로 남긴 유서)

고인은 노동조합 동료들에게도 절절한 호소를 남겼다.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 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건설노조에 대한 “200일 전쟁”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탄압한 정부는 곧바로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았다.

뒤이어 정부는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쟁의권 제약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질서”를 앞세워 건설노조 등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자 투쟁을 고립·위축시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에 대한 저항을 약화키려는 책략이다.



윤석열은 앞장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비난했다. 경찰은 1계급 특진을 내걸고 마구잡이 수사를 벌였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했고, 16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10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

정부가 문제삼는 “[노동자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는 건설노조가 공사현장 점거, 작업 거부, 출입 통제 등 정당한 저항수단들과 이를 통해 쟁취한 성과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경기에 들어간 건설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려고 노조를 탄압하고 투쟁수단들을 제약하고있는 것이다.

숙죄양

윤석열은 노동개혁도, 건설노조 탄압도 중단할 생각이 없다.

고인 사망 후 윤석열 정부는 탄압 중단은커녕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고 해 사람들을 더 열 받게 했다. 죄 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책임 인

정은커녕 죽지는 말라고 훈계한 것이다.

사망 당일 건설노조는 “오늘을 시작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5월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00여 명이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당일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파렴치범으로 문 윤석열 정권이 양희동 동지를 죽였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5월 10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5월 17일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건설노조와 함께 5월 4일 서울대법

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장례식장 앞에서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를 연다.

“장례식장에 오면서 (가족끼리) ‘적어도 우리가 물려서진 말자, 앞으로 갈 수 없겠으나 뒤로 물려서진 말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건설노조는 5월 16~17일 이틀간 전 조합원 상경 파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몸을 불사르며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려 달라”고 호소한 고인의 뜻을 기리고, 건설노조 공격과 노동개혁에 맞서려면 (7월이 아니라) 즉각 파업 같은 집단적·대규모 저항이 필요하다.

진보 정당들도 원내 대응에 머물지 말고 장외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고인의 사망 책임은 건설노조 탄압과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한 윤석열에게 있다. 서민층의 삶이 악화되면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중에 호전적인 친미·친일 외교가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우리 편 분노는 커지고 있고, 윤석열은 위기를 겪고 있다.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윤석열이 자리를 지키는 한 노동자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고인을 추모하는 길이다.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기시대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일본인 사회주의자의 기시다 비판,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한국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운동,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미국 좌파는 어디로?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글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2020년 나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다.

나는 주택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했지만, 이 임대사업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악성 임대인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됐다. 얼마 후 또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이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건 나인데, 이 집에 걸린 어마무시한 사건들을 알게 된 건 우연적이거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였다. 이후 불안한 마음에 강박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떼어 봤다. 볼 때마다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

전 재산에 대출까지 끼고 들어온 집인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자책감이 상당했다. 이 집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지옥에 사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2년 계약 기간이 끝났다.

빌라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는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은행에서는 이런 불안정한 집의 전세 대출을 연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는 다른 가게 대출로 갈아타야 했고, 금리가 고공 행진하던 시기라 대출 이자는 늘어났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결과가 너무나 뻔한 재판이지만 6개월이 넘게 걸렸다. 지금은 또 강제경매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것도 1년 가까이 걸릴 것이다. 재판 비용만 해도 이미 수백만 원이다. 이 집에 산다는 죄로 나는 은행, 법조계, 부동산 중개업계 모두

의 먹잇감이 돼 있었다.

먹잇감

특히 내가 가장 분노스러운 대목은 이런 악성 임대인이 빌라 수백 채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까지 정부가 뒷받침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고,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퍼줬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어 갭투자가 횡행했다.

그런 과정에서 빵! 터진 것이 바로 지금의 전세 사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경·공매까지 가서야, 임차인이 대항력도 갖추어야,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지역 여건에 따라 4억 5000만 원까지), 수사가 개시되고 전세 사기가 의심되며,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에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토록 까다롭게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정책조차도 전세 보증금을 보상해 주는 지원이 아니다. LH가 주택을 매입해 살게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로 개인 사기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인한 건설사들의 이윤 손실에는 혈세를 척척 쓰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전세 사기, 강통전세의 피해자들에게는 한푼이 아깝다니... 서민들을 대하는 이 정부의 민낯과 그들의 우선순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라하게 보여 준다.

분명히 말하지만 전세 사기, 강통전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 이 재난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주의적인 주택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정부를 비판하며 대안을 내놓은 야당 법안들은 정부의 안보다는 나으나, 제대로 된 대책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선순위인 경우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구제해 주는

내용이다. 전세 가격보다 집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택의 시세가만큼만 구제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빚만 남게 될 것이다. 선순위가 아닌 경우 보증금의 50퍼센트만 보상해 주는 방안도 피해자들이 너무나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전세 사기, 강통전세의 피해자들은 야당 의원들의 법안에만 기대어서는 안 된다. 날아간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온전히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운동을 더 크게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0강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

일시 | 5월 17일(수) 오후 8시
발제 |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051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